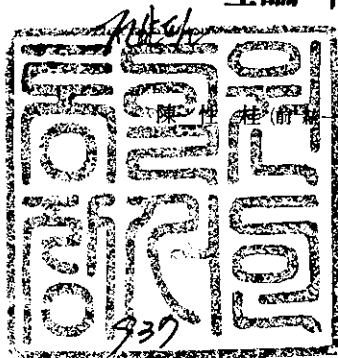


共產主義

그 理論과 實際



陳性桂 (前 統一院 教授)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1. 序 言.....	3
2. 共產主義 革命理論	4
가. 唯物論的 歷史觀.....	6
나. 階級鬭爭論	13
다. 資本主義 崩壞論.....	17
라. 暴力革命論	27
3. 共產主義 運動	36
가. 國際共產黨 組織.....	39
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41
4. 理想과 現實	45
가.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	45
나. 地上樂園의 夢想.....	53
5. 變化하는 共產主義	58
가. 共產國家의 변모.....	58
나. 共產主義理念 修正.....	66

다. 共產體制 改革動向.....	73
(1) 政治的 改革.....	73
(2) 經濟 改革.....	80
(3) 社會·文化 改革.....	91
6. 結 言.....	99

1. 序 言

우리가 공산주의를 바로 이해하여야 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혁명을 배격하면서도 국제화시대에 공산국가와 共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산국가의 實相과 動向을 파악하는 것은 統一을 전망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더욱이 공산주의에 막연한 동경과 이념적 좌경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산주의의 이론을 분석·평가·비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理論과 동떨어진 공산국가의 현실을 바로 아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혁명 이후 72년이 지났고 다른 공산국가들도 공산체제를 실험해본지 40년이 넘었다. 그 결과는 공산국가 스스로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에 따른 역사발전이 중대한 試行錯誤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이, 滅亡하리라고 예언했고 혁명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의 체제조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번영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공산국가

는 硬直된 체제의 老衰化, 사회적 침체, 경제적 비능률이 深化되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능률적인 경제관리 방식을 援用하고 있으며, 정치·사회의 活性化를 위해 개방과 개혁을 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教條的 공산주의 원칙인 공산당 1당 독재와 권력의 집중, 중앙 통제적 계획경제, 집단주의와 정보의 통제 등 공산체제의 본질문제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이론과 實際가 모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소련, 동구권 및 중국 등에서 일어나는 變化를 바라보는 視角은 여러 갈래이다. 共產主義思想의 非現實性和 戰略·戰術的 欺瞞性등 이론적 측면과 可視的인 공산체제의 構造的 矛盾 및 현실적인 병폐현상들을 自認한 공산주의가 스스로 變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共產主義 革命理論

사유재산 제도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의 사회적·도덕적인

해독을 없애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하여 평등사회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理想은 인간의 정치의식이 생겨난 무렵부터 싹튼 것으로서, 그 뿌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고전적인 소박한 개념은 근대적인 공산주의와는 다르다.

근대적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은 이 근대적 공산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이론, 전위조직으로서의 공산당, 실천운동으로서의 전략전술이라고 하는 三重構造가 권력탈취라는 목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운동으로서, 권력탈취를 위한 종합적인 투쟁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부르는 이 공산주의는 단기적으로는 非共產主義體制를 타도하여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장기적으로는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부르짖으면서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의 유지와 세력확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全世界의 共產化를 달성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이래 몇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공산당 1당독재 체제를 수립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공산주의사회는 고사하고 그 중간 목표라고 하는 사회주의사회 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위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던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도 개방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변하고 있다. 동구 공산국가들도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중국과 소련을 앞질러서 변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唯物論的 歷史觀

마르크스·레닌主義者에 의하면 歷史的 唯物論은 사회의 발전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단계의 일정한 사회형태에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全歷史에 공통된 법칙으로서, 객관적이며 사람의 意志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唯物史觀의 構造

유물사관에서는 社會와 政治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

면 理想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과 교환방법의 변동 즉 경제생활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물사관에 의하면 생산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가 있는데,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生産道具와 생산의 경험과 勞動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노동기구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종합해서 生産力이라 부르고, 생산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서 兩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생산력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생산관계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의 생산력에 대응한 必然的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관계의 總合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社會의 土臺이며 法律·政治등 上部構造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社會의 생산력과 생산방법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생산

관계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법률·도덕·종교·예술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上部構造는 하부구조(土臺)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配階級の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필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폭발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念形態(上部構造)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唯物史觀에서는 생산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5段階로 구분하였는데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는 다같이 私有財産을 토대로 한 사회였던 까닭에 사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始共同制·私有財産制·共產主義制의 세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

(2) 唯物史觀의 限界性

유물사관은 共產主義 革命理論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는 이론으로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思想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과 사회의 발전은 辨證法的 法則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唯物史觀에 의하면 生産力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生産關係가 변하고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觀念形態는 이에 대

응하여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산관계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法律·政治를 포함한 모든 정신문화는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 그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정신문화는 生産關係라는 單一原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만일 上部構造가 下部構造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꼭같은 생산조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文化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생산조건 밑에서 같은 文化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生産關係를 각각 달리하는 古代로마와 現代資本主義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唯物史觀 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共產主義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異質的인 思想이 복잡하게 엉켜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支持者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일 唯物史觀에서 주장하는대로 政治가 經濟關係의 반영이라면, 경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共產主義的 정치체도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政治權力을 장악하고난 다음에 政治의 힘으로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즉 상부구조의 힘에 의하여 하부구조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下部構造인 경제관계가 政治, 法律 및 人間의 思想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精神文化의 성격이 오로지 경제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정신문화는 경제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들은 物質的 條件과 人間精神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지능이 낮아서 생산력이 유치했던 未開한 시대에는 생활자료의 획득이 인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食住라는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文化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거꾸로 경제

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社會에는 반드시 그 생산관계에 대응하는 하나의 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文明社會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唯物史觀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원시공산사회·고대노예사회·중세봉건사회·근대자본주의사회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는 각각 그 内部的 矛盾에 의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물사관에서는 私有財産制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사회는 무너지고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물사관은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資本主義制度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社會는 발전하는 生産力과 현존하는 생산관계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망하여 共產主義社會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資本主義도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可能性인 것이지 必然性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變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결과로 共產主義社會가 오지 않고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어떤 사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해서 자본주의사회나 그밖의 다른 사회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共產主義社會의 출현이 生産力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 결과라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共產主義革命運動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物史觀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歷史的 必然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필연적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물사관에서는 인류역사가 辨證法的인 발전과정을 거쳐서 필연적으로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공산주의사회는 다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는 변증법적 법칙이 역사를 지배하고 일단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변증법적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것은 변증법이 아니다.

나. 階級鬭爭論

공산주의에서 유물사관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鬭爭理論을 전개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그런데 계급투쟁이론은 몇가지의 缺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계급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共產主義에서는 계급이란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 意識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社會의 構成部分으로 해석되어야지 합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團體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階級意識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상반된 경제적인 利害關係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본래가 協同의 역사인데, 經濟上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相反될 때에 비로소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단순하게 경제적 이기주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경제적 욕망 외에도 많은 정신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人間社會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층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않은 노동자는 善良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는 악독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

둘째, 階級意識이 民族意識보다 강하다는 假說은 이해가 안된다. 본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을 바탕으로 한 文化的 類似性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한 이해관계에 따르는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적으로 볼 때 민족은 당연히 계급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민족은 기본적인고 계급은 파생적이다.

또한 민족은 불변적이며 영구적이고 계급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다.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해도 한국민족이지만,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도 될 수 있고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

階級の 對立과 투쟁이 歷史를 움직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國家와 民族이 세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민족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歷史는 역시 國家와 民族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여하에 따라 利害關係나 思想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국가와 민족에 따라 한층 더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계급투쟁이론에서는 “노동자에게는 祖國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노동자계급을 위하기 보다는 그가 속한 祖國과 民族을 위해서 敵對國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世界大戰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투쟁이 아닐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敵國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비록 속해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일지라도 자기민족과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 싸웠던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조국과 민족을 초월해서 계급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階級鬭爭理論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계급은 필연적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고 있다. 인간사회에는 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社會의 本質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변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오늘날 富益富 貧益貧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현저하고 安定과 希望이 없는 곳에서 대립과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人類歷史를 모조리 계급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인간에게는 生存競爭이라고 하는 투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相互扶助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階級鬭爭理論에서는 中間階級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급으로만 흡수된 일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중간계급은 大資本家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有財産制度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계급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이며, 부분적인 계급이익 보다

는 전체적 이익을 중요시한다.

계급투쟁이론에서 몰락해 버린다고 주장하는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하지 않고 점점 비대해져서 한 사회와 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中間階級이 완충 작용을 하는 한 階級鬭爭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다. 資本主義 崩壞論

유물사관에서는 변증법적 발전법칙에 의하여 社會가 歷史적으로 각종 형태로 변해왔다는 것과 사회변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生産力의 自己發展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발전의 과도적 단계로서의 자본주의사회는 그 自體內의 모순에 의하여 무너지고 새로운 社會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舊社會의 구조와 운동법칙의 분석을 위하여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분석을 시도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本主義生産에 있어서 資本家에게 돌아가는 利潤은 勞動力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창조적 활력을 가진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노동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 이익을 剩餘價値라고 불렀고, 이 잉여가치야말로 生産의 직접적인 목

적이요 결정적인 자극이라고 말했다.

자본가가 생산에서 얻으려고 하는 잉여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잉여가치설이 전제로 하고 있는 勞動價値說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

(1) 勞動價値說

노동가치설은 공산주의 경제이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발전과 그 몰락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공산주의경제학의 전체 이론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均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勞動은 상품가치를 형성하는 原因이고, 노동은 상품가치의 實質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尺度”라는 것이다.

이 노동가치설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린지 오래된 시대착오적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勞動量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 勞動이란 것은 단순한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다.

물건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勞動이라는 것은 공급을 결정하는 한개의 요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노동가치설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이외의 生産要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은 설혹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論은 될 수 없고 오직 勞動生産物의 價値를 말할 때에 국한해서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셋째, 노동가치설은 「勞動이 商品價値의 尺度」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자체의 가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노동의 가치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 투입된 노동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 그 재화와 용역은 노동의 생산물이다.

결국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勞動 그 자체의 價値는 노동생산물의 가치로 설명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른 노동으로 설명하게 되어있다.

넷째,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生産物의 價値는 투입된 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노동인구가 일정한 노동시간 동안 일해서 생산한 생산물 가치의 총량은 일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가치설을 가지고서는 經濟成長이라는 현

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노동가치설은 일정량의 가치가 모든 계급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分配論으로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총생산의 증대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이 경제이론으로서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가치설이 상품가치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노동자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결과라는 도덕적인 요소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노동가치설이 어떤 정치적 효과 즉 暴力革命을 노리는 선전자료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경제학설이 아니라 政治的인 宣傳道具로 보아야 한다.

(2) 剩餘價値說

이 이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어떤 生産物의 價値가 단순히 그것에 投入된 勞動量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勞動價値는 또다시 노동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잉여가치설이 무너지고 잉여가치설이 없으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론은 껍질만 남게 된다.

잉여가치설은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이론의 각도에서 볼 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의 근본적인 난점은 「生産物의 價値와 利潤의 근
거가 勞動에 의해서만 創造된다」는데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과 원료와
기업가의 능력 등 여러가지의 生産要素들이 필요하다.

資本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자본과 노동의
협동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마땅히 자본과 노동의 양쪽
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이론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勞動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勞動價値가 상품의 가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勞動의 생산성만 인정하고 資本의 생산성은 인정하지 않
는데서 연유하는 주장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체제에 있어서 資本의 중요성은 강
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勞動
만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資本家가 착취한다는 이론은 타당성을
잃은 獨斷論에 빠지게 된다.

둘째로 搾取라는 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企業家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賃金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시장
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서 생산물을 판다. 그때에 그 생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需要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으로서 생산물이 팔리면 이 가격으로부터 생산비를 빼낸 후에 남는 것이 이윤이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에서는 이 이윤을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이윤은 “支拂되지 않는 勞動”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노동과 그것에 대한 지급은 부등가교환이며 노동자는 주는 것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차액이 결국 이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착취이론은 엄격하게 勞動價値法則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소비된 노동량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不等價 交換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란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아 자본가가 손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노동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자본가가 착취당하는 결과가 된다.

노동가치설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설도 적지않은 결함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아직도 이 이론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론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이론적인 탐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社會正義가 땅에 떨어져서 富益富 貧益貧하고, 부정과 부패가 극심한 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착취이론으로서의 잉여가치설을 합리화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資本家の 利潤은 勞動者를 착취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勞動者는 資本家에게 자기의 몫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데 있다.

分配의 不平等을 시정하고 中産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福祉國家가 이룩될 때 착취이론인 잉여가치설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3) 資本主義 自滅法則

노동가치설을 토대로해서 만들어진 剩餘價値說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자본가의 利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 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資本主義 沒落의 법칙을 유도해내는데 동원된 것이다.

資本主義가 몰락한다는 법칙에 따르면

첫째,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점 더 혹심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층 커진다는 것이며,

둘째, 그 위에 자본의 집중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중소자본가가 노동자로 떨어지는 까닭에 노동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노동시장에는 산업예비군 즉, 失業者가 증대하고 이것은 노동임금을 더한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하여 드디어 자본주의사회 타도에 궤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시대의 초기산업자본주의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자본주의체제라고 부르는 自由企業體制는 지난 200년 동안의 생성발전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살려나갈 활력과 탄력성을 갖추게 되었다.

자본주의제도(自由企業體制)는 다음과 같은 長點이 있다.

첫째로,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국민 각 개인이 자기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창의성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 국민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자유롭다는데 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경우에는 용납이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와같은 經濟的 自由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由企業의 制度 즉 자본주의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생산력이 발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여 새로운 생산양상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자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물자의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까닭에 표면상으로는 無政府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共產國家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물자의 공급과 수요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景氣變動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셋째로, 自動安定裝置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景氣나 不景氣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데 있다. 累進稅率을 가진 租稅制度, 失業保險制度和 기타의 社會保障制度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處分所得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自動安定裝置의 작용만으로 景氣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政府가 財政과 金融上的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불경기의 경우에는 減稅措置로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景氣를 호전시키는 財政政策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호경기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증세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

財政政策과 아울러 경기조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金融政策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貨量과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경로를 살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家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타났으며 第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몰락」이나 「자본주의종말」은 적어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 때문에 몰락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 가기만 하는데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뒤떨어진 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民主主義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사회개혁과 복지증진정책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여년 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은 적중되지 않았다. 노동자 자신의 각성과 노동조합활동, 복지정책, 특정산업의 공유화 등의 조치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체제에 불평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해 왔고 해결할 것이다.

라. 暴力革命論

共產主義運動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자본주의사회를 없애버리고 착취없는 자유롭고 풍부한 공산주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변혁은 결코 단순한 경제적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政治的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階級鬭爭은 반드시 政治鬭爭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경우

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투쟁에 의한 社會革命을 역설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국가를 통하지 않는 정치투쟁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투쟁이 직접 통하는 길은 국가이며 계급투쟁의 정치화를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국가가 중대한 관심사이다. 나아가서 國家權力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서의 暴力革命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은 연관성을 가진 이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階級國家論

共產主義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본질적으로 폭력적 탄압기구이며, 국가에 의하여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착취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 복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古典的 國家理論」을 공산주의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대립하는 경제적 利害關係를 가지는 계급이 투쟁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한 충돌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權力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관계의 계급적 대립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 위하여 발생한 국가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暴力的 억압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대계급에 대한 탄압수단임

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탄압성을 배제할 때는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며 국가가 아닌 것으로 될 때 다시 말해서 국가가 사멸해 버리는 사회는 이미 계급적 대립이 소멸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아무리 民主主義的 制度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階級國家일 뿐이지 인민전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 계급국가관은 초계급적 국가관 즉 “國家는 外部의 敵으로부터 국민전체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기구이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기구”라는 국가이론을 무시한다.

물론 국가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으로 국가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教育·保健·文化·社會保障 등과 기타의 公共福利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支配階級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思가 지배계급의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국방과 치안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역사적 경험으로서는 戰爭은 주로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었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막론하고 민족전체가 전쟁에 승리한 국가나 민족에게 예속되

어 왔던 것이다.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生産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과정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체계적인 계획밑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경제가 어떻게 강제력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공산사회에서 강제권력이 배제된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력은 필요할 것이다. 계급국가관으로서의 國家死滅論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2) 프롤레타리아 革命論

공산주의이론에 의하면 革命은 階級鬭爭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피압박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제도를 暴力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血革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다.

공산주의에서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조직적인 대중의 산발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일시적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階級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전체적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혁명이란 것은 정치세력으로 묶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흘리는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이론에 따르면 資本主義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 빈곤해져서 그 결과로 드디어 꺾기하여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기구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던져 가면서까지 革命을 위하여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실정이다.

공산주의에서 자본가의 독재기구라고 저주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 공정하게 볼 때, 그 나라들은 대중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支持에 의해서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다수정당은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는 군대와 경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革命이 폭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少

數의 獨占資本家가 武力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先進工業國家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써 공산주의혁명의 가능성과 그 성공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少數의 職業革命家の 음모에 의한 정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공산주의이론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러한 정변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봉건국가나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時代 어떤 國家에서나 暴力革命은 결코 필연적인 것도 아닌 동시에 찬양할만한 것도 아니다. 폭력은 최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惡이며 必要惡일 뿐이다.

만일 폭력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파괴가 극심한 까닭에 革命에는 성공하고도 파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에서는 공산혁명 즉 폭력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회발전법칙인 것처럼 역설해 왔다. 그러나 공산주의 폭력혁명이론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批判을 모면할 수는 없다.

첫째, 공산혁명은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않고 필요불가피한

必然性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학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특정 국가의 暴力革命을 합리화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셋째, 共產革命理論에서는 “暴力革命은 勞動者와 共產黨의 歷史的 使命”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

넷째, 오늘날까지의 공산혁명은 어느 경우에서나 소수의 직업 혁명가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다수의 지지를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점.

다섯째, 폭력혁명의 결과는 모두 불행해졌다는 것 등이다.

(3) 階級獨裁論

공산주의혁명이론에 의하면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제도의 폭력적인 타도가 필요하나 타도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사멸하는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기구가 타도된 후에 우선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자기자신을 지배계급으로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부활과 보복을 막고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과도기 즉 독재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기간의 국가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국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에는 국가는 여전히 탄압적 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소수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강행하는 階級獨裁機構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반드시 공산사회를 실현하리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적 예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희망에 대한 幻滅은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계급독재와 계급해방의 미명하에 전체주의적 일인독재 혹은 集團指導體制라고도 불리우는 극소수의 集團獨裁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다.

노동자에게 노동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생산력을 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現代的 生産方法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뒤떨어진 생산력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會改造論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지에서 오는 한낱 시대착오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회개조보다도 권력에 대한 욕구불만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와같은 社會改造論者, 예를 들어 共產黨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과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다.

첫째, 階級없는 共產社會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그 선동에 휩쓸려 쫓겨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다.

둘째, 共產黨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政權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산력이 갑자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낙후된 생산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은 승리는 했지만 최초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自由와 飽滿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셋째, 生産力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희망은 부득이 보류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속히 生産力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강제노동 등 노동력 착취를 가중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共產黨權力을 위협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자기방어를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권력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互作用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만이 政權을 침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쪽은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이 강화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들게 된다.

다섯째, 권력자는 권력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마침내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압력세력으로 둔갑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無氣力한 가운데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은 시대착오적인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하는 이론구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후진사회가 낙후된 생산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체권력의 강화와 혁명역량을 위한 파괴력 축적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밖으로는 국제간에 불안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共産主義 運動

資本主義의 발전에 따라 勞動階級이 형성되고 거기서 초보적인 계급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인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초기의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운동은 상대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巨人인지라 단결된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생겨난 것이 勞動組合運動이다. 노동조합운동을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權力의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하고자한 것이 각국의 左翼革命家들이었다.

이들 직업혁명가들은 각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을 국제적 連帶性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높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권장악을 위한 혁명에 이용하려고 했다.

共産主義는 이미 1848년 「共産黨 宣言」時代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國際的 運動으로 인식하였으며, 각국의 노동자들은 행동의 통일과 국제적 단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864년에 영국·불란서·독일과 이태리등의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서 기존 경제제도의 파괴를 맹세하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조직을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第1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각국 노동계급의 형제적 협력을 부르짖었으나,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직을 지도하던 마르크스의 파괴적인 행동에 불만을 느낀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와 기타의 온건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자 1876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 후 1889년 불란서의 파리에서 소위 「제2인터내셔널」이 결성되었으나 이 조직도 역시 많은 異質的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데올로기의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간 것은 독일의 社會民主黨이었는데, 이들도 左派·右派·中央派로 분리되어 있었다. 左派의 이론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하여 자본주의국가를 넘어뜨리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右派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적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改良主義的 실천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中央派는 말로는 左派와 같이 革命을 말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右派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4년 世界大戰이 발발하자 이 조직은 분열되고 말았다.

多數派는 자기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少數派는 급속한 평화를 부르짖고 극소수파는 전쟁을 이용하여 세계혁명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으로 第2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가. 國際共產黨 組織

1917년에 러시아革命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지금까지 西歐社會主義의 思想이나 運動에서 가볍게 보아온 볼셰비키들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亡命革命家나 地下運動家들이 일약 러시아의 支配者로 올라앉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좌익혁명운동의 중심은 러시아로 옮겨지게 되었다.

1918년에서 1921년에 이르는 시기는 유럽에 혁명의 파도가 가장 거센 시기였다. 이 흥분된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의 第1次大會가 1919년 3월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임하는 전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자본주의적 질서가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임박한 세계혁명을 위하여 總參謀部를 조직하자는데 있었다. 즉 코민테른은 “武力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적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고 완전한 共產主義社會로 들어가는 과도적 단계로서의 국제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레닌의 지도밑에 코민테른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진 단일국제공산당으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당은 그 支部에 불과했으며 엄격한 규율과 절대복종이 코민

테른 조직의 특징이었다.

코민테른의 초기에는 공산혁명이 유럽전체로 뻗어나가는 감이 있어으나 연속적인 실패로 세력을 잃고 共産黨은 각국에서 少數派의 위치로 몰락하고 말았다.

레닌主義者들은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게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만으로서는 도저히 세계혁명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힘의 원천이 식민지와 후진지역의 착취에 있다고 믿고, 이들로부터 착취당하는 植民地와 半植民地를 절단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革命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눈을 돌렸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문제는 식민지문제와 약소민족문제로 발전하고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묶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國際共産主義의 중심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노동운동에서 後進國 植民地와 半植民地의 민족운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피압박민족 해방투쟁이란 것은 피압박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국주의국가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확대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해방정책은 民族自決主義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모든 民族은 獨立과 민족적 자유를 가져서는 안되고 각 民族은 한 단위로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도 안되는 것이

었다. 요컨대 공산주의의 피압박민족정책은 공산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피압박민족을 이용하느냐 하는 정책인 것이지 그들에게 獨立과 自決權을 주자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1943년에 코민테른은 “戰時條件下에서는 單一國際的 中心에서 各國 共產黨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해체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코민테른을 해체시킴으로써 세계혁명을 포기했다는 실증을 보이고, 이에 의하여 자본주의국가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大戰이 끝나자 共產主義의 國際的 組織은 다시 부활하여 「코민포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1947년에 「코민포름」(國際共產黨情報局)을 결성하게 되면서 冷戰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1956년에 “전쟁은 必然的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코민포름은 해체되었다.

오늘날 국제공산당은 조직상으로 보아서는 없는 것같이 생각되나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條約機構」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최근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코메콘」(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이 있다.

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1968년 8월 20일 소련軍이 바르샤바동맹군과 함세하여 民主化

路線을 표방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정권을 무력으로 간섭한 후, 브레즈네프는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통한 세가지의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세가지의 독트린이란 「浸蝕型 反革命論」과 「制限主權論」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을 말한다.

이 독트린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合理化하는 것 이외에 장차 다른 공산국가의 主權을 제한하고, 소련 지도층이 내정간섭권을 보유하려는 底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침식형 반혁명론」이란 혁명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혁명을 단지 군사행동이나 군사적 공격의 형태로 간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平和的인 反革命」의 방법은 社會主義의 「民主化 宣言」도 포함하고 社會主義秩序의 개선에 관한 토론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 새로운 이론은 궁극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서 民主化 改革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것을 침식형 반혁명으로 규정하여 내정에 간섭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制限主權論」에 의하면 한 國家의 社會主義體制를 방위하는 것은 그나라만의 임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련이 주도하는 “전세

계 사회주의체제의 임무이며 전세계 사회주의체제의 방위는 國際共產主義者의 義務”라고 宣言되어 있다. 추상적인 국가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사회주의국가의 독립과 주권은 무엇보다 자본주의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주의질서의 위기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내부문제도 역시 당사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세계체제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에 도전하는 內·外部의 세력이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회주의의 大義를 심지어는 全社會主義共同體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는 한 國家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주의국가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1968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국가수준에서 국제수준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을 발표하여 사회주의국가의 主權을 더욱 제한시켰다. 이것은 「世界社會主義體制」의 힘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구실로 合理化하고 있다.

「制限主權論」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소련의 동맹국은 오직 자본주의세계에 대항하여 主權을

행사해야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사회주의체제에 대항하는 주권 행사는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세계사회주의체제의 이익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國際法의 규정, 主權의 상징적인 개념 혹은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自決原則이 아닌 상호합의하는 정치이념을 담은 문서에 반드시 準用되어야 한다.

넷째, 한 社會主義國家內에서의 세계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은 당사국의 문제가 아니라 一次的으로 世界社會主義體制의 문제이다.

다섯째,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제한주권론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共產黨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이러한 이론은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을 소련의 판단에 따라 制限하여 武力介入을 합리화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中國共產黨도 소련의 제한주권론과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이 國家主權의 보편적인 원칙을 유린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소련이 주장하는 제한주권론에 의한다면 결국 소련 수정주의자의

主權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정권에서는 동구공산국가의 脫蘇現象에 제동을 걸기 위해 自由路線을 추구하려던 체코슬로바키아를 武力으로 침공했고 그것을 合理化하기 위해 制限主權論을 宣言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歐에서의 自由化 물결과 脫蘇現象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오늘과 같은 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다.

4. 理想과 現實

가.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

歷史的 唯物論에서는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사회의 출현은 歷史的必然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실현될 社會主義社會 그 자체의 구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된 것을 共產主義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엔겔스의 「資本論」도 자본주의를 해부하는데 그쳤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쓰다가 중단한 것같은 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유토피아로부터 科學에로 발전시키려는 마르크스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고타綱領 批判」에서, 지배계급으로 된 프

롤레타리아가 점차적으로 모든 資本을 부르주아로부터 국가에 수탈한 후의 발전을 예상하고 이것을 공산주의 제1단계 즉, 사회주의단계와, 제2단계 즉, 공산주의단계로서 영성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第1段階에 있어서는 私的資本은 이미 소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는 국가에 고용되어서 노동하게 되므로 그 노동에 대하여 얻는 보수는 아직 平等하지 않으며, 생산자의 권리는 그 제공한 노동에 비례하고 있다. 평등은 노동이라고 하는 평등의 척도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2段階에 있어서는 즉 共產主義社會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分業에 노예와 같이 종속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된 후에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첫째 가는 생활욕구로 된 후에,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에 따라 생산력도 증대하여 協同的 富의 모든 원천이 보다 풍부하게 솟아나게 된 후에, 그 때에 비로소 社會는 그 깃발에 “각자는 그 能力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그 욕망에 따라(부여한다)”라는 구호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생산물과 생산수단의 市場價格을 變數로 하고 기업가의 이윤추구를 動力으로하여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영리생산이 폐지된 후 부여된 사회의 생산력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소비재와 생산재의 생산에 어떤 수량이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生産力 자체의 증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에 있어서 볼셰비키 革命이 있는 후, 또한 第1次 世界大戰 敗戰後의 헝가리·독일·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공산당 또는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어떻게 社會主義를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지적된 社會主義體制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私有財産에 대한 公有財産制 즉 기본적으로는 생산수단·분배수단·교환수단의 社會的 所有가 확립된 社會,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광물자원·공장·철도·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금융기관등을 근로자가 협동하여 소유하는 社會 ② 私的企業에 대한 國營企業 ③ 자유경제에 대한 計劃經濟 ④ 영리성에 대한 公共性 ⑤ 자본가 지배에 대한 프롤레타리아獨裁 ⑥ 필연의 왕국에 대한 自由의 王國등, 어느 것이나 현실적으로 체험된 資本主義社會의 특징 중에서 그것에 對立하는 것으로 각각 그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요컨대 社會主義體制의 기본적인 원칙은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的 所有와 그것의 社會的 運營」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에서도 모든 경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이 경쟁은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會主義競爭이라고 부른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경쟁이란 것은 이런 경우 생산비의 저하와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努力競爭이 된다. 소련에 있어서도 공산혁명 이래 이 사회주의경쟁은 정부에 의하여 크게 장려되고 선전되었다.

소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경쟁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물론 한쪽에서는 사회주의정신의 양양이 항상 강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로 화폐경제적 자극을 이용하는 정책이 나와 초기의 평등주의적 정책은 철폐되고, 여기에 대치되어 能率給과 스타하노프運動과 獨立採算制 그리고 企業長期基金制 등이 매우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쟁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관계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과는 정반대의 完全獨占體制이다. 국가권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노동, 가격등에 관한 최고 지배권이 국

가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완전독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強權的 社會主義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經濟計劃이란 국민경제의 총재생산과정에 있어 그 발전과 균형을 자연의 움직임에 방임하지 않고 국가가 이것을 지도해가는 것이지만 그 국민경제의 순환을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우선 財貨의 흐름과 貨幣흐름의 기본적인 두가지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경제 전체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계획은 재화의 흐름에 대한 物動計劃과 화폐의 흐름에 대한 資金計劃으로 구별된다. 물론 社會主義經濟라고 할지라도 화폐경제로서 현실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폐가 없는 社會라면 물동계획 하나로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문제로 되지 않는다.

소비에트體制의 계획경제를 보면 원칙적으로 물동계획이 주도적이고 자금계획이 종속적으로 되어 있다. 즉 상품의 품질과 수량과 가격등이 계획적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적응하여 자금계획이 성립된다. 商品쪽의 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획지령으로 되어서 각기업에 전달된다. 각기업은 부여된 기준생산량을 최소한도의 철칙으로써서 일정한 품질의 제품수 또는 작업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단에까지 미쳐서 각개인에게로 作業量(노르마)이

부과된다. 이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자금계획이 있다. 各企業에 융자도 해주며 소위 은행신용제가 실시되고 있다.

消費도 生産된 한도 안에서 또 부여된 공정가격하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물동계획을 중심으로한 계획경제이다.

따라서 물동계획을 주도적으로 하는 計劃經濟가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強權的 計劃經濟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노동자는 작업량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 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소비자로서는 계획된 공급면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한도 없고 또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자에 불과하다.

強權的 사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社會主義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産增大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두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生産意慾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노동생산물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소득에 탄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능률을 올릴 수 없다.

생산을 목표량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는 결국 공포에 의한 強制勞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생산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그 어느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고려된 것인데, 소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 運動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立採算制라든가, 어느 정도의 사적생산과 사적공급을 허용하는 企業長期基金制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社會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소비한다는 共同消費의 정신을 가지는 이상, 生産力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地上의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능률과 소득과의 비례가 자유 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방법의 진전에는 과학 특히 技術의 자유로운 탐구가 가장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사회전반의 자유로운 분위기 즉 사상적 구속이 줄어들고 낭비와 침체와 不生産의 自由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편의와 시험에 소요되는 낭비·소모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도 강권적 사회주의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혁신적인 發展은 자유로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상의

혁신에 있어서는 그 動力으로서 私有慾이나 利己心의 작용을 크게 필요로 한다. 營利의 자극을 배제하는 사회주의조직은 생산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비약적인 質的 進歩를 촉진하지는 못한다.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실현되고 生産手段의 私有가 폐지되면 이들의 사유로부터 생기는 不勞所得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활이 과연 윤택해지는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와의 국민생활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필요 내지 욕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共產主義의 第2段階 또는 보다 높은 단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만약 “必要에 따라 消費한다”고 하는 말이 衣·食·住를 위해서 제한되어 있는 생산력을 배당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모든 개인적인 필수품이나 편의품 그리고 사치품이 모두 원하는 대로 부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국가도 권력도 없고 화폐도 상품도 해체하는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현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몇세대의 인류에게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이다. 「理想社會에 있어서는 인간 그 자체에도 큰 변화가 일

어나서 全知全能의 인간사회로 될 것이다. 설혹 모든 財物이 무진장으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優劣이 있을 것인데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그것을 획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산주의사회는 일종의 天國이나 극락세계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理想社會로서의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도 각자의 개성이 없어진 공허한 사회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未知의 世界일 것이다.

현실의 인간사회는 경쟁과 협동도 있고, 대립과 통일도 있으며 利益社會的面과 共同社會的面도 있다. 세계관도 인생관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각자는 자기의 苦樂이 있고 애정과 증오도 있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사회주의사회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유지하면서 소비의 사회화까지도 실현하여 공산주의사회에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현실의 인간성에 적응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먼 未來에 속하는 과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나. 地上樂園의 夢想

본래 공산주의의 소박한 개념은 “사유재산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공동관리만 하면 행

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근대적 의미로서의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主義도 理想的인 전제가 되는것은 私有財産의 否定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앨 수 없는 필요한 것이며 生存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

共産國家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한 결과 주민들은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공산당에 예속되는 한편, 독립된 가치관이 없는 까닭에 이데올로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私有財産은 인간존엄성의 보호와 생존과 生活의 自由를 위해서 없애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所有가 늘어남에 따라 自由도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歷史를 통해서 알고 있다. 물론 私有財産으로 인하여 국가의 통치나 국가방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財産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사유재산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私有財産의 廢絶」을 들고 나와 共産主義社會의 건설을 목표로 공산혁명을 일으켜 72年 동안 共産黨 統治를 한 공산 국가의 경우, 私有財産을 없앨 수 없다는 敎訓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산국가는 사유재산의 폐절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폭을 조금씩 늘려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부를 국유화하거나 共有化하지는 못하고 있다.

私有財産制度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과제로 삼는 공산 국가에 사유재산이 왜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당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공산국가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확대되어 가는 사실로 보아서도 사유재산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입증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 간부나 행정관료등 特權階級들은 사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세습화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일뿐 實際上으로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여기에 바로 共產主義가 가지는 근본적인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에서는 사유재산만 없으면 모든 계급은 소멸될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공산국가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는 엄연히 階級이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서 계급간의 격차가 현저하다. 공산주의 직업혁명가들은 무계급사회를 내걸면서,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느틈에 그 국가권력을 자기목적화해 버리고 政權을 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직업혁명가들은 權力을 잡은 뒤에는 재빨리 特權階級으로 탈바꿈해 버린다.

무계급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절대특권을 가진 계급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特權도 없이 억압만 받는 가운데 오직 노동할 義務만 짊어진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과 평등 그리고 階級消滅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특권계급이 생겨나고 그 특권계급이 세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공산국가에 無階級の 理想社會 즉 地上樂園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幻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共産主義社會가 되면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地上樂園의 꿈은 虛妄한 소리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노동은 能力만큼만 하고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社會는 無限定의 生産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資源은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의 生産이란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의 人間欲望을 다 채워줄 수도 없다.

共産統治者들은 人類가 도달하지도 못할 공산주의사회라는 지상낙원을 표방하면서 인간에게 끝없는 증오와 투쟁을 강요하며

그 理想世界를 共產獨裁라는 강제권력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증오와 투쟁은 필경 相互監視하고 同志間에 투쟁하고 유혈숙청하는 살벌한 사회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지상낙원을 증오와 투쟁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幻想은 白日夢이 아니라면 소박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共產主義에서 선동구호로 부르짖는 理想社會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는 적어도 共產主義者에 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共產統治 72年을 통한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 ① 무자비한 독재정치를 강행하면서도 “행복한 地上樂園을 만든다”고 했고,
- ② 새로운 特權階級을 만들고 계급간의 격차를 점점 확대하면서도 “계급없는 사회를 창조한다”고 했고,
- ③ 一黨獨裁를 만들고 국가권력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도 “國家의 死滅”을 주장하고,
- ④ 勞動者를 천대하고 억압하며 최대한으로 흡사하고 착취하면서도 “노동계급의 해방”을 부르짖고,

⑤ 특권계급의 사유재산을 점점 증대시키고 상속시킬 수 있는 보장까지 하면서도 “私有財産이 없는 社會”를 指向한다고 하고,

⑥ 증오와 투쟁을 선동하고 공산혁명을 최대한으로 수출하려고 하면서도 “永遠한 平和의 樂園”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逆說的인 현상들은 공산주의자들이 意識的으로 만들어냈건 아니건 간에 事實로 잔존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共產主義의 허망된 理想이 空論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가 모순과 과장과 독단과 편견과 비과학성과 非人間的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5. 變化하는 共產主義

가. 共產國家의 變貌

1989년 가을 이후 소련과 동구 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改革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바, 폴란드에서 비공산연립정부구성, 헝가리 사회당의 출현과 국호변경, 서독행 집단탈주와 베를린장벽의 철거, 루마니아 독재정권의 붕괴, 체코·불가리아등에서 자유화운동의 거센 물결은 東歐 각국의 사회 전분야에 폭넓게 퍼져가고 있다.

이런 변혁이 東歐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아직 단

언할 수는 없다해도 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한 과도기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에는 선뜻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소련은東西의 時間帶가 11시간의 차이가 나는 넓은 영토에 인구 2억 8천만, 150종의 언어가 통용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이다. 소련은 연방국가로서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단일국가처럼 통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소련은 종래와 같은 정치·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도 세계 인류의 1/4이나 되는 1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로서, 공산당의 지도하에 40년 이상 사회주의국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체제 발전의 지연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신이 행해지고 있다.

소련의 정치와 경제는 최근까지 1930년대 스탈린방식의 당조직과 운영방식, 경제관리방식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해 왔었다. 관료제가 심화된 소련은 비능률이 각 분야에 만연되고, 사회와 경제전반이 침체되어 드디어는 침몰하는 帝國의 운명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레즈네프 시대에 소련의 공산체제는 “미사일을 보유한 낙후한 第3世界” 또는 “대포는 만들 수 있으나 빵은 만들지 못하는 체제”로 비유되었었다.

실제로 소련사회 내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약속하는 여러 가지 命題에 대한 信條는 회박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黨의 선전에 무관심하며, 심지어 黨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믿지않는 형편이었다.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주창하며 스탈린이 제시한 여러가지 공산주의 원칙을 부정하거나 수정해 나가고 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이전에도 教條的 共產主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1950년대 후반기에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수정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스탈린이 사망한지 3년이 되는 1956년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스탈린을 格下하는 연설을 하면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수정주의노선을 추구했다.

후르시초프가 부분적 수정을 시도했으나 먹는 문제 하나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실각한 후, 당권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2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후르치초프의 개혁노선을 후퇴시키고 準動員體制를 구축했었다.

현재 소련의 개혁 주도자인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개혁정책이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와는 質的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적 오류나 혁명전략전술 만을 비판했지만, 자신은 스탈린의 모든 공산주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毛澤東 사망후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낙후한 공산중국을 극복하는 문제 즉 중국을 현대화시키는 문제였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완성시키는 일과 현대화시키는 일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毛澤東의 후계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적용한 소위 毛澤東思想이 중국을 현대화하는 데에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내용을 재점검하고 중국의 공산체제를 産業社會와 核時代에 알맞게 변경시킬 수 밖에 없었다.

東歐의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 기존의 국내외 질서를 새로이 개편하려는 경향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89년 들어 두드러지기 시작한 동구권의 變化 趨勢는 8월 폴란드에 비공산연립정부가 등장한데 이어 헝가리 共產黨이 社會黨으로 전환하고 헝가리의 국호까지도 변경하는 등 脫이념적인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였고, 10월 18일에는 동독의 강경 보수주의자였

던 에릭 호네커가 퇴진하고 11월 9일에는 냉전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이었던 베를린장벽을 철거함으로써 동구권의 변화는 그야말로 붓물 터지듯이 인접국가로 확산되는 경향에 놓여있다. 동구권 내에서도 비교적 保守主義國家로 알려진 체코와 불가리아에서도 대규모의 시위와 함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폐기등 정치경제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연일 시도되고, 특히 루마니아에서는 24년간 1인 독재를 해온 차우세스코가 改革을 거부하다 끝내 처형되고, 공산체제의 수정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向方에 대하여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동구의 현실이다.

이러한 동구권 개혁의 動因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東歐의 공산국가들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산화될 수 있는 객관적 條件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스탈린의 강요와 지원에 의해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후 사회·경제체제를 사회주의화했으나, 동구제국은 소련보다 먼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인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東歐諸國은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 되었으며, 西歐와의 경제적 격

차는 확대되어 심각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東歐國家들로 하여금 실제적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때에 이미 동구는 경제관리 운영면에서 계획과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市場社會主義」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동구는 소련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의 영향으로 표면적인 體制 수정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내부적인 개혁의 잠재력을 축적해 왔다.

오늘날 동구권 변화의 특징은 첫째, 체제개혁의 주도권은 進歩的 재야단체가 주도한다는 것으로 헝가리의 「민주광장」, 폴란드의 「자유노조」, 동독의 「노이에스포름」, 체코의 「77헌장」그룹등이 시위등을 통해 체제개혁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들 세력들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 非共產政黨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1985년 소련의 지도자가 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동구지역의 변화를 조장 내지 용인하여 왔고, 한편으로 신데탕트의 영향으로 동구와 서방국가들과의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되어 왔으며, 셋째로는 체제개혁의 요구와 변화양상이 아직은 사회주의 이념의 범주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끝으로 民族主義 성향이 점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정착시키면 국가도 부강하고 국민복지도 증진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현실화시킨다고 1黨支

配體制의 국가를 세워 사유재산제를 철폐하여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장악하고 국가에 의한 中央集權的 계획수립과 命令經濟體制를 확립하고 모든 주민을 集團化시켰다. 그 결과는 오히려 경제적 생산성은 감소되고 사회의 活力이 떨어져 국가전체가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공산혁명을 추진했던 엘리트들이 기대했던대로 움직이지 않아 사회주의적 경영방식은 실패를 거듭했다.

體制와 制度는 인간이 그 시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창안되어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산체제에서 生産性的의 문제점은 생산력 증대를 위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보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이윤동기 여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침체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경제발전과 생산증대 보다는 平等한 분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물질적 이윤동기 없이 平等分配만 하면 더욱 열심히 生産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낮아졌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기 보다는 利己主義的 현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물질적 욕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등 생산과 분배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인 富가 아무것도 없다시피한 형편에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실현하려다 보니, 실제로는 정치·사회적으로 신분상 不平等構造를 심화시키고 말았다.

공산주의 경제구조로서는 생산의욕을 가진 經營者·技術者·勞動者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다. 市場經濟體制의 민간기업과 같이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내려서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연구하거나 노력하지 않고서도 경영의 유지와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한 경제제도이기 때문에 공산사회에서는 創意性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공산체제에서 현대와 같이 고도화된 수많은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의 계획과 지령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현대의 경제수준과 규모는 이러한 경제운영 방식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데까지 이르렀다. 정치면에서 黨内の 문제를 국가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면에서도 倒産해야 될 공장기업을 도산시키지 않고 국가가 그 손실을 감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가 파탄되고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 자체가 완전무결 할 수 없는데, 더욱 時代

마저 바뀌다 보니 現時代 상황과는 더욱 크게 동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국가들이 理論의 부분적인 보완만으로는 쌓이고 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며, 대폭적인 이론수정과 현실개혁을 해야만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산국가들은 체제 안의 곳곳에 꼭 차있는 관료제의 병폐와 비능률로 인해, 정치·사회의 정체현상과 국민생활의 낙후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고 체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에 여러 공산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개혁하는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한 공산주의체제가 등장한 뒤 오늘날까지 많은 공산국가에서 다원적인 공산체제가 형성되어 공산주의는 실로 많이 변화되고 분화되었다.

나. 共產主義理念 修正

공산체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 이해하려면 먼저 그 體制의 기본바탕이 되는 理念의 변화부터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 이념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 하는 문제가 밝혀지면 그 체제의 변화성격을 알 수 있다.

政治理念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에 나오며, 따라서 이

는 현실 불만과 비판에서 싹튼다 하겠다. 하나의 정치이념이 성립하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새롭게 급박히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래의 이념이 그 효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理念은 역사의 특정시기와 특수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상황조건에서 절대 眞理일 수는 없다

공산주의 체제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이념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의 수정은 공산주의 역사의 재평가와 공산주의의 핵심적 이론들을 재해석 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1985년 3월 소련 共産黨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사상적 근거를 레닌에게서 찾고 있다. 그는 레닌主義의 회복을 주장하고, 레닌 이후의 소련 역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소련 共産黨史와 역사의 재평가 작업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스탈린의 戰時共産主義 理論과 이에 따른 개인숭배와 폭정, 흐루시초프의 主觀主義, 브레즈네프의 官僚主義 등 과거의 지도자들이 「레닌主義」에서 이탈했다고

비난하고, 레닌-스탈린-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로 이어지는 黨史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改革政策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스탈린體制의 이론적 유산을 실천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기하고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보와 정통성의 확립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다른 편으로는 이를 위해 공산주의 원칙의 수정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있음으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마르크스主義」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은 과거 東歐에서 간단없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中國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미, 1950년대말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연맹 제7차 대회는 改革路線을 채택하면서 마르크스主義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교조체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해석을 하고, 黨의 지도적 역할을 재평가하였다. 중국에서도 1984년 당 제12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공업등 도시경제에서 시장경제와 가격체제의 형성을 촉구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당의 노선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때에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主義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치 않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런 경향은 마르크스主義를 각 공산국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즉, 공산체제의 분파작용은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質的인 상이성까지 보임으로써 비공산이데올로기로 발전할 분파도 생기게 되었다.

소련형과 구별되는 동구형, 혹은 중국식 모형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의 출현 가능성은 공산주의이론의 수정으로 부터 나타나고 있다.

세계 도처의 공산국가들이 처음에는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해 왔음에도 국가마다 그 이념의 해석을 달리하고 體제의 상이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 못지않게 각국의 특수사정, 즉 역사적 문화적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지리적 환경, 정권장악 방식등이 이념의 정립과 체제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共產主義의 주요 원칙을 수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共產主義 理念을 실천하여가는 과정, 즉 過渡期에 대한 문제는 이제까지 공산주의 원칙의 하나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즉, 「社會主義」는 「共產主義」로 가는 일시적인 과도적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에 異論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최근 중·소에서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소련학자들 중에는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과 그 본질적 성

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창하며 과도기 문제를 제기했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철학의 제문제」에는 스탈린의 개인숭배식 사회주의 이론은 시대요청에 맞지 않으며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역사 발전단계에서 독자성을 갖는 사회형태”라 규정하여 사회주의가 과도적 단계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에서도 「社會主義 初期段階論」이란 이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회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역사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론이다.

둘째, 공산주의 원칙에는 역사발전과 사회현상 및 세계질서를 계급간의 대립현상으로 해석하며, 사회발전의 원동력도 계급투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階級鬭爭을 공산주의사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과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과 소련에서는 계급투쟁이 시급한 문제이거나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社會主義 初期段階論」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생산력의 낙후와 소유 및 분배제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민들의 물질문명 욕구와 사회생산성 낙후간의 모순이 현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했다. 즉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력 증대

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계급투쟁보다 對外開放과 경제체제의 개혁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국내의 지식인들에게 “우리는 같은 장애물에 서있다. 우리의 문제는 계급투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셋째, 공산주의 이론에는 共產黨의 기능은 혁명의 參謀部 혹은 전위대로서 국가사회를 이끌어 가는 유일한 조직으로 되어있다. 최근 중국과 소련에서는 黨과 國家機關間의 기능분리 문제가 제기되고, 黨의 지도와 당조직 운영의 민주주의적 中央集中制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黨의 혁명적 지도 보다는 국가의 법체계에 의한 지배와 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의 民主化를 올바로 통제 추진하는 방법은 사회주의적 法治國家의 창설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법치국가의 최대 특징은 法の支配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공산주의 이론의 본질,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生産手段에 대한 個人所有의 否定이다. 이 소유제 문제의 원칙에 대해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공산체제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수정은 이미 東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수

정변화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제관리 운영에서 「市場社會主義」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운영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社會主義 初期段階論」에서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나 여러가지 소유형태가 있을 수 있고 분배도 노동에 따른 분배와 기타 분배형태가 병존한다고 했다.

경제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라는 두가지 기본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등 계획적 지도하의 시장조절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市場經濟의 모델로 전환시켜 가고 있다.

여섯째, 공산주의 체제에서 개인노동이 商品의 성격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이지만,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소련에서 다같이 “공산주의사회에서의 노동력은 상품이다.” 혹은 “아니다”하는 논쟁이 새삼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공산사회에 있어서도 노동이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노동자집단 전체이지 개개의 근로자가 아

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근로자는 노동력 이외에 가진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이 상품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노동이 상품화되고 雇傭經營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搾取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공산주의 원리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영업과 利潤獲得·富의 축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소련등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改革과 開放路線」은 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더 빨리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오늘날 공산체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수정은 정치이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겠다.

다. 共產體制 改革動向

(1) 政治的 改革

공산체제의 권력구조상에서 국가권력은 중국적으로 黨에 귀속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당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 헌법개정으로 당의 권력행사방법이 직접적인 형태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바뀌는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소련의 새 헌법에서 실질적인 最高代議機關으로 규정된 인민대회 대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비밀투표는 관행인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복수후보에 대한 선택으로 바뀌었고, 입후보자들이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까지 규정했다.

공산체제에서는 스탈린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黨이 사전에 내정한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을 묻는 말하자면 선택권 없는 선거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예찬되어 왔다. 모든 주민과 각종 회의체는 당의 최고 지도층에서 미리 내정한 인물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나마 각급 당조직의 제1서기는 당지도부가 내세운 인물을 거수로 선출했다.

그러나 복수후보를 내세운 선거라고는 하지만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指名權은 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당의 권한은 아직도 막강하며, 당의 최고 실권자의 뜻에 의한 인사개편 현상은 없어질 수 없다.

고르바초프는 집권하자 1년간에 黨中央委員中 약 40

％에 해당하는 위원을 새로운 젊은 인물로 교체하여 권력구조를 재편했으며, 행정부의 각 부처와 각 공화국의 간부들도 대폭 교체했다. 이러한 인물교체는 고르바초프의 지위를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그의 개혁정책은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소수민족으로부터 혹은 당내의 보수세력으로부터의 반발을 누르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여파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共和國에서의 민족분쟁,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8년 3월 제 7기 1차 全國人民代表大會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 개방노선을 재확인하고 새로 채택한 민주적 의결방식을 통해 행정기구의 개편과 국가지도부 인사를 재구성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국가 중요직책에 대한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은 고령의 간부들이 1線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대회에서의 국가간부 선출은 비밀투표, 600여명의 외신기자에 대한 회의장 공개 및 취재허용, 현장중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최고 지도부의 고령화 방지에 실패했다. 즉 鄧小平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등소평이 實用主義 路線에 따라 개방경제를 추구, 도입

하였으나 정치개혁이 부진한데 항의하는 천안문민주화 요구(1989. 6. 4)가 일어나자 중국은 경제개혁 개방은 지속시키되,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東歐改革의 선두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미 지난 1970년대초부터 경제부문의 中央集權制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가미하는등 경제개혁부터 서서히 손을 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부문에 대담한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

헝가리에서의 脫共產主義는 이미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982년에 私企業의 활동을 인정한 이래 1987년에는 원시적이거나 공산권 최초로 증권시장을 개설했으며, 이어 1988년에는 일부 중요상품 및 공공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自由價格制度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사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제정된 신회사법이 1989년 1월 1일부터 발표된 후 개인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방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헝가리의 경제개혁은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등 이른바 다당제와 자유선거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1989년 10월 임시당대회에서는 공산당(사회주의 노동자당)의

黨名을 西歐式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헝가리 사회주의당」으로 개정하는 한편, 국호도 「헝가리 人民共和國」에서 「人民」을 빼 「헝가리 共和國」으로 바꿔 대외적으로는 유럽회의에 가담할 뜻을 표명했으며, 1990년대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와 함께 「유럽 共同市場」(EEC)에의 가입을 추진하는가 하면, 스위스와 같은 永世中立國으로 변신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폴란드 개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악화돼 온 심각한 경제난이 그 역사적 배경이며, 自由勞組와 노조지도자 바웬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執權黨인 공산당(폴란드 통일노동자당) 지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화해가 절대적이며 특히 자유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으로 1989년초 각계대표 50명으로 구성된 「圓卓會議」를 소집하여, 자유노조의 합법화와 새정부 수립 그리고 議會選舉 실시등을 자유노조측과 합의했다.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후보들이 上院議席 100석중 99석을 차지하고, 下院의 경쟁허용의석 161석 모두를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둬, 공산당이 지난 40여년간 누려온 權力獨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야루젤스키 폴란드대통령도 1989년 8월 17일 어쩔 수 없이 자유노조 주도하의 聯立政府 구성을 수락했고, 하루뒤 자유노조 출

신 마조비에츠키를 總理로 하는 非共產黨政權이 동구권 사상 최초로 폴란드에 탄생했다.

새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와 상품부족 그리고 外債등 심각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 도입과 赤字企業의 민영화 그리고 경공업 진흥 등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東獨은 1989년 10월초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 슬로바키아등과 함께 東歐의 개혁거부국가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개혁에는 철저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1989년 11월 9일을 기해, 지난 1961년 동독사람들이 서독등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비극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졌다.

東獨은 1989년 10월 7일의 건국 40주년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방문을 계기로 同時 多發的으로 불붙기 시작한 民主化·自由化 시위로 인해 개혁이라는 대세를 따르게 된 것이다.

1989년 11월초까지만 25만여명의 동독인들이 고국을 등지는 대량 탈출과, 주변 東歐國家들의 개혁조치와 맞물려 거세게 일어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18년 동안 東獨을 통치해 왔던 강경파인 호네커 당서기장이 1989년 10월 18일 사임함으로써 東獨의 개혁정책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으며, 11월 9일에는 베를린장벽등 모든 국경선의 전

면개방과 수백만 동독인의 서독자유왕래라는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전개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統一 독일의 성급한 기대와 아울러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우려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東獨의 개혁정책은 全黨大會를 통해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黨指導部의 전면 교체와 당규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당원들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유선거·사법부 독립·언론자유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多民族 聯邦國家인 유고슬라비아는 1988년 여름 이후 연방제의 뿌리가 흔들릴만큼 정치·경제적 불안과 민족간의 알력이 복합된 시위사태가 계속되어 왔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自主管理制를 특징으로 하는 「市場社會主義」 「分權化된 聯邦制度」 「勞動者自治와 住民自治를 도입한 政治制度」를 실시해 왔지만, 다른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2차대전중 抗獨빨치산 전투를 이끌면서 독립을 쟁취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후 단결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그동안 정치·경제개혁이 미흡했고, 오랫동안 불안의 요소가 되어왔던 민족문제 등이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체제는 관료주의를 배척하고 정치적 分權과 사회적 自治를 시도하는 대담한 내용이었으나 제도상 개혁이

실제적 사회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자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행정과 黨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개입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공산주의자 동맹)은 1989년에 접어들면서 권력독점의 종식은 물론 다당제 실시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경제면에서는 「自主管理」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주관리기업에서의 극도의 비효율성과 경영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점등으로 인하여 자주관리체제가 형태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진 현상이 빚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의체가 누적되고 인플레이의 심화현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經濟分權化 원칙은 先進共和國인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後進農業地域인 콜비아地域들간의 갈등과 연방탈퇴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밖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등 東歐各國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기하고, 90년 여름 이전에 자유총선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 經濟改革

공산국가들은 스탈린식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생산과 분배 관리를 행해 온 결과,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적 낙후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통제적 經濟管理運營은 현실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中央統制機關인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서들은 산하의 공장·기업소에 생산목표를 할당하고 어디서 원료를 구입하고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 판매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사항들을 결정하여 명령하는 방식으로 經濟管理를 해왔다. 심지어 기차표나 성냥갑의 디자인도 黨이나 국가의 中央計劃機關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생산품과 이윤을 국가에 납입하고 종업원에 지급할 봉급을 수령해오는 일 밖에 하지 못하여 기업소가 자체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을 國家에 요청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自律調整機能을 부인하고 계획당국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計劃經濟는 지난 기간 소련인들에게 직장과 低物價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企業所가 이윤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동일의 봉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만약 어떤 기업소가 생산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여 이윤을 많이 내면 날수록 다음 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만 배정받게 되어 기업의 利潤은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경쟁이 없으니 기업이 도산할 리 없고, 노동자도 웬만해서는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없으므로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보다 많

이 생산하거나 또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 원초적으로 價格自體를 계획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 동기를 갖지 못하는 기업에 가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제계획 관리구조에 대한 반성은 東歐諸國에서 먼저 일어나,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있어 왔다. 그러나 공산체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 鄧小平이 實權을 잡고 實事求是의 정책을 시행하고 부터이다.

동구나 중국의 經濟改革에 대해 무관심했던 소련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에서는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침체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과 공업생산을 제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스탈린식 命令經濟體制는 산업화 초기에는 기초공업을 축성하고 농업을 근대화시키는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나 고도산업화로 가는데에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족쇄로 되었다. 스탈린주의적 생산제도로 인하여 귀중한 자원의 투입에 비해 지극히 비경제적인 생산품이 산출되었다. 외연적 확대성장방식에의 의존으로 노동력과 자원이용에서 커다란 낭비를 거듭해 온 것이다.

소련은 軍需産業分野를 제외하고는 제조업분야 생산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군사정치적 초강대국임에도 개발도상국과 같은 교역 패턴, 즉 연료와 에너지를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처지에 있었다.

소련의 노동자들은 근무처의 임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비합법적인 개인노동, 서비스등 부업에 의한 보조수입을 올리든가, 기업이 架空勞動者의 명단을 만들어 이 명의로 확보한 자금을 분배하는데 한 몫 끼는 것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데에 힘을 써왔고 근무처의 사업에는 등한하였다. 한편, 분명한 所有의 개념이 없어 직장 자재나 부품을 갖다 물물교환하거나 용돈 벌이를 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스탈린의 사망후, 부분적인 經濟改革이 행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 원칙을 고수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명령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이 형식상으로만 생산현장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노동자원으로 관리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986년 2월말의 소련 共産黨 제 27 차 大會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에서의 당면과제로서

-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경제의 발전

- 계획의 개선과 국민경제발전의 전체적 균형
- 국가관리체계의 개선등을 제시했다.

상기의 개혁방향은 종래에 항상 외쳐오던 동원 구호의 성격을 넘어선 經濟管理運營 방법의 개선에 역점이 두어진 실질적 개혁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조치에는 경제부서에 대한 당의 사소한 간섭을 배제하고 비전문적 개입을 방지하며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넓힌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가격체제를 조정하여 가격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정가격이 아닌 계약가격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市場經濟體制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공산권에서는 생산력을 높여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경제관리구조의 개편이 진행중이다.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은 모든 공장·기업소, 집단농장의 업무수행에 파급되고 개개노동자의 활동과 작업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련은 1985년 말에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2000년 까지의 長期展望計劃」을 통해 앞으로 15년 이내에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의 2배, 농업생산의 2.5배 증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중국도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구체적 사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1980년의 250달러에서 금세기 말까지 1,000달러로 올려 국민의 衣食을 충족시키며 21세기 중반에는 4,000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

다.

소련은 '86년의 第 27 次 黨 大會를 계기로 기업과 개인의 자
유재량권과 책임의 확대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88년부터는 國家企業法에 따라 기업의 완전독립채산제와
자금의 자기조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국영농
장(2만2천)과 집단농장(2만6천)은 1983년부터 약 20명 단위로
집단청부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오다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이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1987년 후반부터 2~3개 가족을 하나의
생산단위로 하는 家族請負制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농촌의 소규모 생산단위에 대한 청부제를 생산수단의 장기임대(10
~15년)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며, 집단농장등에 대해 완전독립채
산제와 자금 자기조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7년 5월 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개인영업 및 가족기업이나
3인이상의 협동조합 형식의 사기업활동을 허용하였다. '88년 5
월 소연방 최고회의는 사기업과 집단농장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 국영기업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協同組合法을
채택하였다.

개인영업과 서비스분야에서의 계약노동제 허용으로 미장원, 이
발소, 가구 수리업, 식당, 사진관, 택시의 개인 경영이 시작되었다.
물론 契約勞動은 집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농촌에서의 소

규모 家禽業과 養蜂등은 가정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요금과 불입금등에 대해서는 지방당국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분야의 個人營業 허용으로 흑해연안의 「오테사」항에는 500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공원에는 個人商店이 문을 열어 가정에서 만든 의류와 공예품을 팔고 있다. 사기업의 등장으로 개인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자 1988년 4월에는 빈부 격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종래에 최고 13%였던 소득세율을 최고 90%까지 대폭 인상하였으며, 기존의 중앙은행, 건설투자, 대외무역 등 3개 은행을 중앙·농업·공업·도시개발·저축·대외경제 등 6개 은행으로 기능을 세분화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個人에 대한 수표발행을 허용하며 신용 카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련에서는 1987년부터 불공평한 평등주의 임금체제를 개편하여 同一勞動에 대해 30%까지의 능력격차를 두었다. 能力과 實績을 중시하는 임금체제로 전환하여 단순노동자(20~25%)와 관리기술요원(30~35%)의 임금을 차등 인상하였다.

個人營業부문 뿐 아니라 대규모 國營企業所에 대해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 자율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실험이 실시되는 예로서 2천명의 종업원을 고용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한 건설기계공장을 들 수 있다. 이 工場의 生産計劃은 중앙에서 하지만 1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전환시켰고, 同工場이 취득한 이윤의 30%만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 이윤은 기업소 자체가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하여 재투자를 하든 종업원의 처우개선을 하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中國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금지되어 온 사기업 및 개인 영업행위를 인정하자 사적 영업부문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중국에는 약 1백만 이상의 국영기업이 있고 이들 기업은 약 8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수입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업의 장려 결과, 1987년 말 사기업의 수는 1천 3백여만개에 종업원은 약 2천만명이나 되며, 영업실적은 연간 소매상품 판매총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기업은 대다수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手工業, 料食業, 소규모 상업등에 종사하는 영세한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십명에서 수백명까지의 종업원을 채용, 대규모의 건축업, 운수업, 대외무역업에까지 업무를 확대하는 기업(20여만개 추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私企業法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기업의 증가에 따라 대

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고용, 저임금 지급, 과중한 노동시간 등 제
반문제점을 개선, 건전한 사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기업의 허용 결과,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점
으로 貧富의 격차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언론들은 빈부
의 격차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
다.

1987년 8월 「工人日報」는 중국이 보다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소득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격차의 적정선이 어
느 정도인가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북경에서 발행되는 영문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도 1987년 8월 초, 해안도시와 경제특구
등의 부유한 동부지역과 사막 및 산악지대인 가난한 서부지역을
예로 들어 동서간의 소득격차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가난
한 농민들이 1년에 한 사람이 200元 이하의 소득을 얻는데, 北京
의 택시 운전사는 한달내에, 과일류 거래업자는 1주일 이내에 농
민들의 1년분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청부제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의 수준도 천차
만별이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경영의 도산매업,
서비스업, 수리업, 요식업 등 이른바 「個體戶」의 높은 소득이다.

經濟管理에 시장기능과 가격체제를 일단 도입하면 대내적으로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對外經濟開放의 필요성이 생기며 또 그것이 용이해진다. 중국은 홍콩과 인접한 深圳을 위시하여 4개의 경제특구와 14개의 항구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山東半島등에 경제특구의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1988年 3月の 제 7기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는 海南島를 省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經濟特別區로 하는 의안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참가하고 자본주의 경제법칙과 제도에 따라 대외무역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1987년 초에 GATT에 비밀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중앙통제 계획경제체제로 부터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중국은 개혁조치의 하나로 瀋陽市 등에 국영주식거래소를 개설하는 등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에 입각한 경제개혁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파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통해서만 사회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나, 개인간 소득격차와 그에 따른 주민간의 위화감등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노출될 때, 교조적 보수주의로 되돌아 갈 소지는 항상 있다 하겠다.

소련에서도 중국 못지않은 새로운 경제개혁안들을 실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르바초프의 정권기반이 약화될 때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선례는 동구국가들에서도 보여주었다. 중·소

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개혁을 동구공산국가 대부분이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공산종주국인 소련이 앞장서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동구제국의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헝가리는 20년 가까이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미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때늦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헝가리 사회노동당의 마티아스書記長은 소련사회의 변모를 역사적인 사건이라 표현하는 등, 헝가리 지도자들은 소련이 헝가리의 개혁을 그 모델케이스로 삼고 있는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폴란드 역시 소련에서 일고 있는 經濟改革 동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 우르반은 1987년 3월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에 지지를 표명하며 여러나라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갈 경우, 개혁의 성과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였고 그후 그는 폴란드는 중앙통제하의 계획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사유자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운영방식의 개혁안을 채택,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밝혔다.

아시아의 공산후진국인 베트남도 소련식 경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한정된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공산정권은

사이공(현 「호지명」시) 점령이후, 물리적인 인구 재배치, 남부상
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기업국유화의 추진으로 경제적 재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1985년에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 1986년에는
「하노이」와 「호지명」市에서 한해 5인 이하를 고용하는 소규모
商工業의 개인경영을 허용하였다. 農業部門에서는 개인 또는 집
단단위로 정부가 할당량 이상의 초과생산분에서 40%를
자유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여 농업증산을 꾀하고 있다. 분배·
제도에서도 1985년에 생필품의 배급제도를 폐지하여 경제적 난
관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 조치로 인해 오히려 제품부족과 인플
레션의 부작용만 유발시켜 다음해에는 일부품목의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다.

(3) 社會·文化改革

多元主義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사회문화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또는 사회구성체인 각 이익집단
들의 욕구와 갈등에 의해서 야기된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政
治制度나 經濟政策에 영향을 주어 정치와 경제의 변화를 초래한
다. 즉, 밑으로부터의 변화욕구가 증대되면 上部構造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일원적인 공산체제에서의 사회변화는 이제까지 위로부터

터 주어지는 것이 상례였다. 다시말해 黨權을 장악한 집단이나 집권자의 의지에 의해 변화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변화는 정치제도나 정치방식의 변화와 경제정책이나 경제운영방법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이같은 政治方式과 經濟政策의 변화가 중국에는 사회구조나 사회 분위기, 혹은 社會意識까지 변화시킨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정치나 경제는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相互作用은 자유민주체제보다 미약하고,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소련, 중국, 동구의 사회에서 일고 있는 社會變化는 새로운 집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의 개혁의지와 개혁정책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면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의지가 확산되는 양면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鄧小平이 實權을 장악한 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한지 10년이 되어감으로써 중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자율화를 바탕으로 한 改革과 公開性을 원칙으로 한 개방정책의 기치를 내걸자, 소련사회의 저변에도 변화의 물결이 파급되고 있다. 東歐諸國에서는 進歩的 재야단체 등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함으로써 정치경제 개혁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문학이론인 사회주의적 寫實主義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內容」이라는 원칙이 정치·사회·경제체제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공산권에서 정치지도자가 교체되고 정치의 개혁이 이뤄짐에 따라 이 원칙에도 수정이 가해져 종래에 「형식만 민족적이었지 내용은 사회주의」였던 체제가 그 內容에서도 민족적 색채가 좀더 농후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견 사회문화에서는 전통으로의 회귀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련과 중국 및 일부 동구권 국가들은 多民族國家이다. 共產體制가 소수 민족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족 고유의 전통을 되살리며 나아가 민족자주권 회복을 둘러싼 마찰과 진통이 일고 있다. 民族문제와 함께 宗教문제도 공산사회에서는 잠재된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東歐를 이해하는 데에서 宗教問題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지만, 동구에서 종교의 중요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고 東獨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슬로바니아」와 「크로티아」를 주축으로 하는 북부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서구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로마 카톨릭에 귀화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적 사조에 익숙해 있었다.

공산국가들에서는 역사의 재평가 작업, 이데올로기의 修正作業

이 정치와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된다. 소련에서는 과거-스탈린 시대의 歷史를 재평가하고 중국에서는 毛澤東 시대의 역사를 재평가한 결과 前 시대의 社會相과는 다른 社會相을 보이고 있다. 소련과 중국에서는 과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을 복권시키며, 과거 금서로 되었던 저작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 一元的 政治 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퇴색함에 따라 공산사회에서도 다원성의 싹이 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共產國家에는 다원적인 民主社會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자발적 결사체인 利益集團의 결성이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된 대중조직의 이익표출기능이 부여되는 등, 社會的 多元主義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共產國家에서는 통치자(극소수 당료)만이 전체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모든 하급 당원과 일반주민은 정보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모든 주민들은 자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情報만 보유하면 되었고 기타 정보는 알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왜곡된 宣傳의 틀 속에 安住토록 하였다.

소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改革은 公開性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최근 소련은 言論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을 허용하고 있으며, 反蘇 비방이나 선동과 관련된 형법의 개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2월 소련 언론사 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스탈린 統治時期를 포함하는 소련 역사의 암흑기에 관해 더 많은 진실들을 國民에게 밝힐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실제로 소련의 텔레비전은 스탈린시대에 強制收容所에서 죽은 희생자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하였고, 언론들은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官僚의 부패상, 매춘, 마약, 청소년 문제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어느 한사람도 없었던 거리의 신문게시판 앞에 지금은 市民이 운집하여 官吏의 비행을 폭로한 기사와 反體制知識人の 비판담화가 게재된 신문을 보고 있다.

소련은 出入國管理法을 보완, 자국민의 해외출국을 완화함으로써 소련계 유대인의 해외이주가 확대되고 있다. 言論은 이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등 비판기능을 갖기 시작하였다.

文藝分野에서는 예술가 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져, 소련 작가동맹 대회, 작곡가동맹 대회, 영화인동맹 대회 등 예술가 대회가 계속 열리어 예술활동의 民主化 路線을 선언하였다. 문예계에서는 공개성 원칙을 적용하여 파스테르나크등 과거에 反革命 詩人, 反蘇文學家로 낙인찍힌 작가들이 재평가, 복권되고 있으며, 과거 禁書로 묶여있던 문학작품이 출판되고 있고, 소련 出版界에서는 개

인 저서는 3천부 이하를 자비출판 하도록 허용했다.

영화인들은 영화인동맹 제 1서기로 반체제 성향의 「글리모프」를 선출하고 동맹지도부의 2/3를 신인으로 교체하였다.

문화의 해빙을 선도한 분야는 연극이다. 약 60개의 극장에서 시범적으로 檢閱을 폐지하고 입장료를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는 등, 극장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소련의 社會改革은 간부나 현장노동자들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청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알콜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규정하고 反알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社會紀綱確立을 위한 反알콜 캠페인은 1985년 5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소련 시민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있다. 주류의 판매는 오후 2시부터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벌금을 부과하며 「보드카」의 가격을 25% 인상하는 등, 절주운동을 기강확립운동의 제1순위로 꼽고 있다.

공산통제사회에서 특별한 오락이나 레저생활이 없는 까닭에 소련에서는 음주가 성행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노동위반, 무단결근, 이혼의 주원인은 음주때문이며 사망원인도 심장병과 암 다음으로 알콜중독에 의한 것이었다. 심지어 술취한 노동자는 다만 직장에 출근했다는 시늉만 하거나 취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직장내에 음주투쟁위까지 설치하는 기업소, 술주정뱅이의 사고방지를 위해 기계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특별반을 설치한 공장도 생겨났다.

이같이 소련의 基層 勞動者들은 음주, 노동기피, 태만에 져어 있었고, 한편 간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지시사항만 전달하며 무기력하게 군림이나 하려는 사회풍조가 병폐로써 지적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공산주의식 생활방법을 회피하며, 생산노동자가 되기 보다는 사무직이나 관리자를 지향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때문에 대학진학 희망자가 지나치게 많아 이것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中國에서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10년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주력해 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改革·開放政策의 성공이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이다.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중국인들은 「관타오(官倒)」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공금횡령, 뇌물수수, 이권개입등의 부정부패가 관도라는 말속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국무원은 1988年 9月 마침내 2,000元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등 26개항에 달하는 국가행정기관 공작 인원의 「貪污 행정처분 집행규정」이라는 법규를 발효시켰다. 이어 1개월 후 중국 공산당 총서기 趙紫陽은 黨·政 관리들의 부정 부패 근절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다음 사회문제로는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일 계층의 불만과 중국 화폐의 2중구조에서 연유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에는 내국인용의 인민폐와 「外匯兌換券」이라 불리는 인민폐가 동시에 통용되고 있다. 2~3년 전부터 시작된 물가폭동, 그로 인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가전제품등을 살 수 있는 외국인용 인민폐의 가치가 높아져,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두가지 화폐의 가치를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中國內에는 「거리의 암달러상」들이 차츰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추세라 한다.

부정부패 이외에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수가 3천 5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 1人子女문제이다. 중국의 개혁파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1가구 1자녀」의 人口抑制 政策이 외아들-외딸을 ‘작은 황제’ 또는 ‘작은 태양’으로 만들었고, 그 여파로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설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들이 한자녀에 대한 過保護로 인한 육아의 문제 뿐 아니라 외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적극 설치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의 노령화 문제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 10억의 인구 중 1억에 가까운 8천8백만명이 60세 이상이라고 중국당국은 집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文盲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에 따르는 대책, 교통법규의 위반을 방지해야 하는등, 수많은 사회문제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다른 개혁당국의 고민은 교통과 통신의 후진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다. 개혁과 개방정책의 결과, 流動人口가 급격히 늘어나서 중국대륙의 유동인구는 하루 5천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송과 통신은 이에 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

6. 結 語

우리는 오늘날 공산국가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북한과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對話의 廣場에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世界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人間尊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국제평화와 질서를 위협하고 세력확장과 침략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함으

로써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疎外階層의 해소와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면서 폭력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이 적용된 현실을 보면 공산당 1당 독재의 강화와 생산수단의 私的所有를 철폐한 결과만 가져왔지 착취와 소외현상 그리고 억압된 삶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社會와 人間을 혁명하고 개조한다는 과격한 이념을 기초로 하여 생겨난 공산체제는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지 72년이 지났으나, 그간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누적시켜 왔을 뿐이지 문제의 해결능력은 갖지 못했다.

공산체제가 자기수정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체제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들이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의 본질적 屬性을 가지고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체제 안에서 제도의 수정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후진공산체제는 아직도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한 공산체제는 공산세계 안에서 홀로 개혁과 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북한만 언제까지나 공산권 안에서 異端으로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오늘의 중·소개혁 현상과 동구의 變化樣相이, 북한공산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모습을 진단하는데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공산체제의 실상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세계사의 主流에 참여하는 길은 우리가 북한공산체제의 개혁을 유도하며, 우리의 참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조성이며, 當面한 課題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성원이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다.

〈參 考 文 獻〉

1. 共產主義批判 方法論(韓國精神文化研究院)
2. 共產主義批判(極東問題研究所)
3. 共產主義 革命類型과 實體(自由評論社)
4. 社會主義와 共產主義(靑文社)
5. 共產主義와 統一戰線(康仁德)
6. 蘇聯主要論文選集(極東問題研究所)
7. 中國主要論文選集(極東問題研究所)

8. 共產圈의 變化(韓國國民精神教育研究會)
9. 經濟學·哲學草稿(칼·마르크스)
10. 도이체·이데올로기(칼·마르크스)
11. 共產黨 宣言(칼·마르크스)
12. 고타綱領 批判(칼·마르크스)
13. 家族·私有財産 國家의 起源(프리드리히·엔겔스)
14. 國家와 革命(우라지밀·레닌)
15. 帝國主義論(우라지밀·레닌)
16. 무엇을 할 것인가(우라지밀·레닌)
17. 레닌主義諸問題(요셉·스탈린)
18. 比較共產主義와 現代 國際秩序(安秉俊)
19. 共產圈 研究(極東問題研究所)
20. 現代 共產主義 研究(安秉永)

共產主義 그 理論과 實際

1990年 1月 18日 印刷

1990年 1月 25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234-4102

(국통연 89-12-137)

